

## 「민군 갈등의 유형과 해소전략」 토론요지

이 준 건 박사 (한국갈등관리학회)

- “민군갈등의 유형과 해소전략”을 항공부대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의 취지와 결론에 공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민군갈등 사례분석 연구가 계속되어 군과 지역사회 간의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가 합리적, 효율적이면서 보다 바람직하게 변모되기를 기대한다.
- 오늘날 사회는 탈 이데올로기, 탈 군사화, 정보화, 고성장 경제사회 및 도시화 현상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또한 현대사회는 체제와 제도, 생활수준과 의사결정 방식, 사회구조와 가치기준, 의식구조 등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남으로써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 물질위주 가치관, 한탕문화 현상 등이 만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부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학력 및 문화수준의 향상, 과학 기술의 발전 등으로 시민들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다 더 확보하고, 덜 형식적이며, 더 개성적이고, 자아표현의 자유를 향유하고 싶어한다.
- 최근 들어 군비행장이나 사격장 등 주요 군사시설의 설치나 이전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민·군간의 갈등은 물론, 주민피해 및 보상과 관련된 군항공기 및 주야간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과 위험피해 보상을 포함한 환경오염피해 보상과 관련된 갈등현안들이 계속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 갈등은 국가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여기에 정부나 군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수립 요구와 관련한 갈등현안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기존의 연구자료들은 민군갈등을 분류하여 각 특성별로 유형화하고 갈등의 원인이나 특성 분석과 단편적인 관리전략을 제시하고 있거나 군의 특수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짙은 편이다. 또 지방자치

의 실시와 더불어 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야기되는 원인과 갈등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많다고 보여진다. 주로 군사기지를 기피시설과 선호시설로 양분하여 이전관련 갈등을 분석하는 경우가 흔한 편이다.

- 특히 충남지역은 계룡대(3군본부), 연무대(육군훈련소), 공군서산기지, 육군항공학교, 군 사격장 및 훈련장 등이 상당수 소재하고 있어 민군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동시에 국방대학교 논산이전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군사기지의 이전 및 확장 및 공군전투비행단의 소음발생 등 지역주민들과의 갈등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해소방안을 찾아내야 하며, 앞으로 유사한 민군갈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갈등관리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 민군 갈등관리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군기지가 새로운 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그 시설지역의 주민들은 이주해야 하는데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있던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은 이주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군사시설이 입지하게 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 지정(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사유재산권 행사 및 규제토지의 활용도가 낮아져 지가하락이 나타나게 된다. 셋째, 군부대의 주둔 및 임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같은 환경오염 유발이나 안전위해로 인한 생활상의 각종 불편함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군사기지 입지갈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민군갈등 실태분석을 통한 해소방안의 모색은 일반적인 효율적 갈등관리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이 있고 지속가능한 민군갈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더욱이 군사시설과 관련한 신규시설 유치 갈등 및 기존시설 이전 갈등은 님비현상, 뽀미현상으로 엇갈리면서 특정 지역단위에서 민군간의 갈등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피해 및 보상과 관련한 소음피해 보상 갈등과 함께 환경오염피해 보상 갈등도 민군간, 관계당국간 책임소재 문제로

비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민·군간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수립 요구도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충남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민군갈등 현안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 최근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자발적인 스터디 그룹인 ‘도시계획연구모임’이 4월 1일 오후 회원과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강당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으며, 여기에서는 앞으로 세종시의 오랜 숙원인 군부대 이전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을 도시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목표로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시 중심부에 위치한 11개의 군부대로 인해 군사보호시설 면적과 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며,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건축물의 고도제한 문제도 있는 만큼 집행부와 함께 군부대 이전을 추진할 것이 논의된 바 있다.
- 더욱이 충남 서산시의회와 경기 수원시의회 등 군용비행장이 있는 25개 시·군·구의회 의원들이 소음피해 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최근 서산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특별법 입법을 위한 청원운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서산시의회가 최근 4월 25일 밝혔다. 연합회가 준비 중인 특별법안은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소음피해 보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년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3년마다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국회에 정식으로 입법을 청원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 또한 충북 청원군 남일면이장단협의회가 최근 5월 6일 회의를 열고 공군 사관학교 이전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7년간 지역에 위치한 공사 비행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피해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 지역이 발전 가능

성이 높았지만 공군사관학교의 비행장이 들어서면서 농지법 제한지역으로 묶여 개발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협의회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 20여개를 지역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고 공군사관학교 측에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주민 공감대 형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불만과 함께 3차 우회도로 노선 변경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목적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차 우회도로가 남일면 송암1·2리 마을 한 가운데를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주민들은 공군사관학교의 일부를 매입해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